

박근혜 '국정농단 선고' 생중계된다

법원이 박근혜(66)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 생중계를 허용했다. 형사재판에서 1심 선고 중계가 허용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판사 김세운)는 3일 박 전 대통령의 선고 생중계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중계방송을 허가하기로 했다"며 "법정 내 질서 유지를 고려해 법원이 촬영한 영상 4가지 정도를 송출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7월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

오는 6일 오후 2시10분 선고 중계
형사재판 1심 중계는 역사상 처음
"공공 이익 고려해 중계방송 허용"

를 개정해 재판장 결정에 따라 주요 사건 1·2심 판결 선고 중계방송을 허가하기로 했다. 하지만 실제 하급심 선고가 중계된 적은 전무하다. 개정 이후 이재용(50)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사건 1·2심과 원세훈(67) 전 국정

원장의 '국정원 댓글공작' 사건 파기환송심 등 국민적 관심을 끈 주요 사건들의 선고가 있었지만, 법원은 피고인들이 부동의했고 이들이 앓을 사이이 공익보다 크다는 취지로 중계를 허용하지 않았다.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인 최순실

(62)씨 1심 역시 중계되지 않았다. 최씨와 함께 재판을 받은 안종범(59)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신동민(63) 롯데그룹 회장 등 피고인들이 동의하지 않은 점 등이 고려됐다.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만큼은 중계를 허가하기로 결정해 지난해 3월 탄핵심판 선고와 같이 전국에서 실시간으로 결과를 지켜볼 수 있게 됐다.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는 오는 6일 오후 2시10분에 열릴 예정이다. **뉴스시**

사우디서 배우자 폰 염탐하면 '혼쫄'

사우디 아라비아에서 배우자의 휴대전화를 염탐하다가 적발될 경우 징역을 살고 벌금을 물게 된다. 2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사우디 정보부는 이날 배우자 휴대전화 염탐을 범죄 행위로 규정하고 적발된 이들에 대해 징역 1년과 거액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사우디 정보부는 성명을 통해 "사우디에 살면서 배우자를 스파이 할 생각을 하는 혼인자들이 있다면 다시 한 번 생각해야 할 것"이라며 "질리면 벌금 50만 리얌(약 1억 4000만 원)을 물고 감옥에서 1년을 지내야 한다"고 밝혔다. 사우디 정보부는 "이번 조치는 협박, 횡령, 명예 훼손 같은 사이버 범죄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도입됐다"고 강조했다. 이슬람권인 사우디는 보수적인 국가이지만 휴대전화 보급률과 소셜미디어 사용 빈도가 높다. 사우디 인구 절반 이상이 25세 미만의 청년인데 이들 대다수가 휴대전화 사용을 즐긴다. 사우디의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는 작년부터 '비전 2030'으로 불리는 사회경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그는 엄격한 이슬람 율법 적용을 완화하고 시민들에게 더 많은 자유를 허용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특히 여성 권리 증진에 힘쓰면서 여성의 자동차 운전과 축구 경기 관람을 허용했고, 부부가 이혼할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자녀에 대한 친권을 우선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하는 법안도 도입했다.

인도 불가촉천민 시위 확산 최소 7명 사망

인도 북부와 중부에서 카스트제도의 최하위층인 달리트(불가촉천민)를 보호하는 법안이 악용되고 있다는 대법원 판결에 항의하는 달리트들의 항의와 폭력이 확산해 최소 7명이 숨졌다. 2일 일부 지역에서는 철도 운행이 중단되는가 하면 자동차들이 불에 타고, 학교와 은행들이 문을 닫고 통행금지가 선포됐다. 편집과 하리아나, 우타르프라데시, 마드hya프라데시주 등에서 수많은 달리트들은 달리트보호법이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법 적용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가짜이나 취약한 달리트의 안전을 더욱 위험하게 만들 것이라며 대대적인 시위에 나섰다. 인도는 카스트제에 따른 차별을 불법으로 금지, 위반 시 즉각 체포 후 최고 1년의 징역형에 처하고 있지만 신분에 따른 편견과 차별은 여전히 고쳐지지 않고 있다. 달리트들은 도축이나 화장실 청소 등 할 수 있는 일자리가 제한되고 사원을 방문하거나 종교를 공부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인도 정부 통계에 따르면 2016년 한 해에만 달리트를 겨냥한 범죄가 4만 건 이상 발생했다. 지난 주에는 자신이 소유한 말을 뺏다는 이유로 한 달리트 남성이 더 높은 카스트의 마을 사람들에게 살해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13억명에 달하는 인도의 전체 인구 가운데 약 2억명이 달리트 신분이 다. 시위에 나선 달리트 단체들은 대법원의 판결 재검토를 위해 전국적인 항의시위를 추구하고 있다. 라비 산카르 프라사드 인도 법무장관 역시 대법원에 판결을 재검토해줄 것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美 공항서 항공기 2대 충돌, 2명 사망

미 인디애나주 북동부의 매리언 시 공항에서 2일(현지시간) 항공기 2대가 서로 충돌해 2명이 숨졌다고 현지 검사관이 발표했다. 그랜트 카운티의 크리스 부치 검사관은 WTHR-TV와의 인터뷰에서 이날 매리언 도심공항의 활주로를 이륙한 비행기 한 대가 막 착륙하던 더 큰 비행기와 전속력으로 부딪혔다고 말했다. 더 작은 항공기는 즉시 추락해서 불 탔고 조종사와 탑승객 한 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그는 증언했다. 이들의 이름은 당장 공개되지 않고 있다. 부치 검사관은 큰 비행기에서는 아무도 다친 사람이 없다고 말했다. WTHR은 그 비행기는 5명을 태우고 착륙했다고 보도했다. 그 밖의 자세한 사고 소식은 아직 공개되지 않고 있다.

지리공감코리아정보·정책지원단 | 전화 062-224-5800 | 팩스 062-222-5548
湖南新聞

광주 초·중·고 학생 0.8% 자살위험군 진단

광주지역 초·중·고등학생 0.8%가 자살위험군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초등학교 1·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 6만3873명을 대상으로 정서·행동 특성검사를 실시한 결과 관심군이 2754명(4.31%), 자살위험군이 518명(0.80%)로 파악됐다.

시교육청, 6만3873명 대상 정서·행동 특성검사 결과 교육청 전문기관 치료 지원

학교급별 관심군과 자살위험군은 고등학교가 739명·211명, 중학교가 882명·300명, 초등학교가 1133명·2명으로 나타났다. 광주시교육청은 자살 위험 징후가 있는 학생은 학부모 등을 받아 심층면담을 통해 검사 절차와 관계없이 즉시 전문기관이나 병·의원의 치료가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올해도 지난 2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초·중·고에서 정서·행동 특성검사를 진행한다. 또 광주시교육청은 학교로 찾아가는 스쿨닥터와 정신건강전문가 학교 방문사업을 통해 상담치료를 진행한다. 일선 학교는 자체적으로 생명 존중 및 자살예방교육을 연 4시간 이상 실시한다. **조인호 기자**



북한 자수신동들의 실력은? 남측예술단 평양공연4일차인 3일 대관도 시범단 일행이 만경대소년학생군전을 방문한 가운데 자수신동들이 훈련을 하고 있다.

행안부, 찜질방 3곳중 1곳 안전관리 여전히 미흡

1341곳 중 38.4%에 해당하는 515곳 지적사항 나타나

제천 복합 건축물 화재 사고 이후에도 찜질방 등 안전관리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안전부는 2월5일부터 지난달 28일 현재까지 국가안전대진단 진행과정에서의 과태료 부과 현황 등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3일 밝혔다. 현재까지 국가안전대진단 합동점검이 실시된 찜질방은 1341곳으로 이 중 38.4%에 해당하는 515곳에서 지적사항이 나타났다. 대부분 스프링클러나 피난유도등 주변 적재물 비치로 인한 기기 작동 방해 등 경미한 사항으로 현장 시정 등이 이뤄졌으며 사안이 중요한 96곳에서는 과태료가 부과됐다. 과태료 부과는 찜질방이 96곳으로 가장 많았고, 노인요양시설·요양병원 80곳, 대형공사장 53곳, 숙박시설 50곳, 중소병원 42곳, 식품제조판매업체 29곳 등의 순이었다. 이들 다중이용시설들은 대부분 소방시설 관리 불량 사항으로, 화재 경보 또는 스프링클러의 자동 작동 스위치를 의도적으로 꺼 놓은 경우, 비상구 폐쇄 및 물건 적치, 방화문 훼손 상태 방치, 법률상 의무화돼 있는 소방훈련을 미 실시한 경우 등이 있었다. 지난 2월 부처 합동 안전점검에서도 찜질방 등이 밀폐된 공간에 있고 신속한 대피가 어려움에도 화재 경보기를 꺼 놓거나 작동하지 않는 사례들이 많았으며, 습기로 인한 화재설비 부식 등 관리 불량이 다수 지적됐다. 특히 화재 경보기 등 비상방송설비 설치 기준이 연면적 3500㎡ 이상의 시설물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중소 찜질방의 경우 설치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아 향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김석진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이달 13일 국가안전대진단이 종료할 때까지 꼼꼼하게 점검해서 우리 사회의 안전 수준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겠다"면서 "대진단 이후 비상구 폐쇄·물건적치 등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은 법·제도, 투자확대, 점검과 단속, 문화운동 등 다양한 대책을 통해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시**

모두, 안녕하세요?

국가건강검진이 국민의 건강을 지킵니다

건강 IN
건강한 정보, 건강한 생활

국가건강검진

- 일반 건강검진
- 생애건강기 건강진단
- 연유아 건강검진
- 임 검진
- 구강 검진

'국가건강검진' 효과 비교

42%p 감소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사람 vs 건강검진을 받은 사람)

18%p 감소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사람 vs 건강검진을 받은 사람)

심뇌혈관 질환 발생률

보건복지부 | 콜센터 129 | 국민건강보험 | 고객센터 1577-1000